

2013. 3. 28.

보도자료

이 자료는 2013년 3월 29일(금) 조간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KDI 홍보팀

TEL 02) 958-4030 FAX 02) 960-0652 E-mail press@kdi.re.kr

하도급 거래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

이수일 KDI 연구위원 · 이호준 KDI 연구위원

1. 연구 배경 및 의의

- 새 정부는 경제민주화를 추진함에 있어 재벌 지배구조 개선과 함께 하도급 거래 개선 등 중소기업 보호를 주요 항목으로 설정함.
 - 지난 정부의 동반성장 정책 추진 시 나타난 사회적 이견이 현 정부에서 재현될 개연성 존재
-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재 하도급 거래 개선을 위해 시행 또는 추진 중인 주요 정책들의 적절성 및 실효성을 이론적,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함.
 - 하도급 거래 개선을 위한 제도는 크게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 정책과 수급사업자 경쟁력 제고 정책으로 대별

○ 관련 정책이 정부 역할에 부합하는지에 관한 적절성 분석 및 실효성 분석을 통해 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함.

□ 본고의 분석결과는 대-중소기업 문제에 대한 접근방식, 시장에 대한 정부개입의 적절성 및 정부정책의 실효성을 둘러싼 사회적 이견을 완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2. 연구 주요 내용

□ 현재 하도급 거래 개선을 위해 시행 또는 추진 중인 정책들은 전통적으로 인정되는 정부의 역할에 부합하는 적절성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구두 발주행위 방지, 부당한 기술탈취 방지 등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 정책은 경제주체의 사유재산권을 보호하고 시장실패를 교정한다는 측면에서 정부 역할에 부합

○ 납품단가 조정체계 개선, 산출연동보상제 확산, 수급사업자 간 협동조합을 통한 협력 강화 등 수급사업자 경쟁력 강화 정책은 시장실패를 교정하고 소득과 부를 재분배한다는 측면에서 정부 역할에 부합

□ 반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거래상 지위의 현격한 차이 및 중소기업의 영세성으로 인해 정책의 실효성은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파악됨.

○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거래상 지위의 현저한 차이로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 정책의 실효성이 부족

○ 수급사업자의 열악한 거래상 지위와 영세한 경영여건 탓에 수급사업자 경쟁력 강화 정책의 실적이 미흡

□ 한편 하도급 거래에 관한 실증분석결과는 수급사업자의 수익성을 높이고 수급사업자에 대한 원사업자의 지원을 늘리기 위해서는 전문성 제고를 통한 수급사업자의 거래상 지위 향상이 필요함을 시사

- 수급사업자의 거래상 지위가 낮을수록 수급사업자의 수익성 하락
- 원사업자가 해당 수급사업자와의 하도급 거래를 중시하고 거래의 대체가 힘들수록 수급사업자의 수익성이 높아지며 원사업자의 지원수준도 증가

3. 주요 정책제언

□ 분석결과는 정부 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1)제도 개선을 통한 하도급 거래의 공정성 향상, (2)수급사업자의 전문성 제고를 통한 거래상 지위 향상이 필요함을 시사

(1) 하도급 거래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서는 원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와 납품단가 조정 시 협동조합의 적극적인 역할 수행을 이끄는 제도적 기반의 마련이 필요함.

- 처벌규정 강화를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확대 적용, 불공정 거래행위가 적발된 원사업자의 정부조달 참여 제한, 공정위의 하도급법 관련 전속고발권 폐지 등을 제시함.
- 납품단가 조정 시 협동조합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케 하기 위해서는 협동조합의 납품단가 조정신청권 행사의 실효성 제고와 납품단가 조정 협의과정에 대한 협동조합의 참여권 보장이 필요

(2) 수급사업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는 협동조합과 사업협동조합(이하 '조합')을 플랫폼으로 하는 수급사업자 간 공동사업 활성화가 필요함.

○ 이를 위해 조합의 행위에 대한 공정거래법 적용을 완화하고 중소기업 간 공동행위에 대한 인가요건 및 절차도 완화하는 방안 검토가 필요함.

- 최종 소비자의 직접적인 피해가 예상되거나 중소기업 간 경쟁이 현저하게 훼손되는 경우 등에만 공정거래법을 적용

○ 또한 조합 및 중소기업중앙회의 공동운영자금 조성과 운영 활성화를 통해 조합의 공동사업 운영자금 부족문제를 완화할 필요

❖ 문 의: 이호준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재정투자평가실 연구위원(02-958-4752)